

이륜차도 잡는다...후면카메라 월 1천건 적발 '효과있네'

광주 수완동 1곳 시범운영...4개월간 과속 등 4891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 67건...경찰, 연말까지 12곳으로 확대키로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가 한 곳에서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단속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후면단속카메라 단속이 이륜차 교통 위반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 11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지난 1월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사거리에서 후면단속카메라 1기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4월 1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결과 지난 4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4891건이 단속됐다. 한 달 평균 1200건씩 단속된 셈이다.

후면단속카메라는 기존에 단속할 수 없었던 이륜차까지 포함해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륜차는 통상 앞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아 도대 차량 전면부를 촬영해 단속하는 기존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로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4개월 동안 541건 단속됐으며 각각 신호위반 12건, 과속 462건이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 탑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사례 67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사륜차는 신호위반 24건, 과속 4326건이 단속됐다.

광주경찰은 후면단속카메라를 올해 말까지 총 1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사거리, 동구 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서구 상무대로 시몬스 사거리, 운전역4번출구 사거리, 남구 효덕로 광주대 사거리, 북구 서하로 북부경찰서 사거리 등 6곳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차량 과속이 빈번한 곳이다.

경찰은 광주시, 동구청, 민간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등 방법을 통해 광주 5곳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설치한 카메라는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정식으로 가동한다.

전남경찰도 지난 4월부터 목포시 옥암동 아라리움아파트 사거리, 상동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사거리, 산정동 에스오일주유소 사거리, 연산동 연산교차로 등 4곳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 8대를 운영한 결과, 총 6581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륜차가 적발된 건수는 총 47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은 이밖에도 목포 4대, 순천 9대, 여수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가 시범 가동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대, 함평 2대, 무안 1대 등 20기의 후면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단속카메라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난폭운전을 하던 이륜차 운전자를 효과적

으로 적발할 수 있게 돼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범기업 파산한 줄 알았는데... ‘소송 희망’ 생겼다

피해자들, 배상 못 받아도 사법적 단죄 기록 남기려 소송 재판부 확인 결과 일본에서 회생 절차 거쳐 현재 운영 중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법적 단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파산한 줄 알았던 이 회사는 재판부 확인 결과 회생절차를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송을 이어갈 희망이 생겼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유족 14명 등 총 15명이 일본기업 훗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하고 유족 한 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각각 1200만~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일제강제기 강제동원돼 훗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한명인 조동선(96)씨는 피해자 당사자로 유일한 생존자다. 조씨는 1943년 신호로나이 광업소에 강제동원됐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원고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은 훗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가 지난 1996년 파산을 한 것으로 알고도 끝까지 재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1995

년 회사경영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구가 기각된 원고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기각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훗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가 회생경신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은 자유를 박탈당하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원고들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어렵더라도 역사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어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지를 제대로 듣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도 딥페이크 신고...가·피해자 분리 조치

시교육청, 전담팀 꾸려

광주 지역 중·고교에서 딥페이크(Deepfake·불법합성물) 피해가 발생해 교육청이 대응 조치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한 중학교 1곳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고생 4명이 피해 신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날 현재까지 중·고교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한 광주지역 학교는 2곳이다.

한 중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피해 신고에 따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됐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에 나섰고 신고받은 경찰도 조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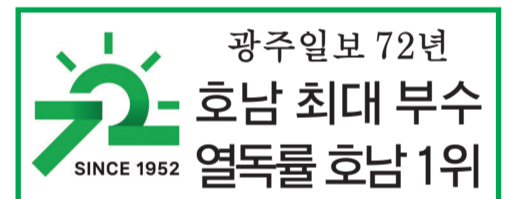
광주의 한 고교에서도 여학생 4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에도 중학교 2곳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해 시교육청이 심리 상담 등 조치를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분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성인식개선팀, 유초등교육과 교관보호현장지원팀, 미래교육기획과 정책기획팀 소속 직원 11명으로 딥페이크 전담팀(TF)을 꾸렸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부당 특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유 확정...직위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

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연합뉴스

알려 왔습니다

본보는 ‘한국건설 회생결정 됐지만...아파트 신축 현장 ‘후폭풍’ (8월 26일자 6면)’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실시공 의혹을 받는 시공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고층부 외벽 석재가 군데군

데 비어 있는 것은 가설작업대(swc)를 설치하기 위해 고정 장치를 장착했던 자리로, 입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미시공 상태였을 뿐 석재가 떨어져나간 사실이 없다”면서 “저층부 외벽 석재가 파손된 것은 폭우, 토사와 무관하게 시공 과정에서 장비에 의해 발생한 파손이며, 지하주차장에 공기 정제로 결로가 생긴 바는 있으나 침수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